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과제 소개

auri

구분	과제명	과제책임
수탁 과제	2018년 주거재생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및 관리 등을 위한 용역	여혜진
	범죄예방 컨설팅 사업	손동필
	경상북도(상주, 군위, 청도) 한옥 전수조사 및 DB구축 연구용역	이민경
	걷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지침 마련 연구	오성훈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모델 개발 연구	유광흠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연구	조상규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엄철호

❶ 2018년 주거재생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및 관리 등을 위한 용역

이 연구용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에 따라 법정 기구로 지정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재생지원기구에서 주거재생형으로 분류된 주거지지원형과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에 대한 사업 관리·지원 업무와 정책 기획·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17년 68곳이 선정되었으며, 이 중 주거지지원형과 우리동네살리기는 33곳이 선정되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17년도 선정된 주거재생사업 중 공기업 제안형을 제외한 주거지지원형 15곳, 우리동네살리기 15곳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또한 2018년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99곳 가운데 주거지지원형과 우리동네살리기는 45곳이며, 이 중 공기업제안형을 제외한 39곳에 대한 총괄 관리와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도시재생지원기구가 수행하는 법정 업무는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사업 지원 및 관리 업무이다. 이는 크게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검증 업무, 활성화 계획 수립 및 변경 컨설팅 등 계획수립 지원 업무와 공정관리, 사업 지원 컨설팅, 연차별 실적평가 검증 등 사업 지원 업무로 구성된다. 이러한 업무는 각 유형별 지역 맞춤형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통한 사업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는 전략과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및 사업관리카드를 활용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현황 관리로 수행된다. 둘째로 제도 개선 방안 검토 및 공모·사업 시행 가이드라인 운영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국가기본방침 및 「도시재생법」에 대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정 방안을 검토하며, 전략 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선, 주거지지원형과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이 신규로 도입됨에 따라 요구되는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또한 지자체가 소규모 주거지정비사업,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탄

탄하게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셋째, 주거재생형 도시재생뉴딜 활성화 시책 발굴 및 지원 업무이다. 이는 사업 추진 여건의 변화에 따른 정책 수요를 검토하고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부 등 부처 협업사업이 활성화되어 장소 단위 지원 사업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네트워킹 및 홍보 지원 업무가 있다. 이는 매년 개최되는 ‘도시재생 한마당’을 기획하면서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 참여자 간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수행하는 업무이다. 이 외에도 주거재생 관련 세미나를 지원하거나, 광역지자체와 전담조직의 네트워킹과 정보 확산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도시재생지원기구는 법정 업무 수행과 더불어 지역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과 애로사항을 살피고 문제 해결을 지원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이 자생적·지속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행정·주민·지역 전문가의 역량을 골고루 갖추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여혜진

② 범죄예방 컨설팅 사업

연이어 발생하는 강력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의 각종 범죄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범죄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해졌고, 「건축법」 제53조의 2(건축물의 범죄예방)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해외에서는 발생 범죄의 사후 처벌에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범죄 대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영국, 미국, 호주 등을 중심으로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효과성이 입증되면서 제도적 기반 및 정책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환경과 다른 해외 사례의 무분별한 도입, ‘염리동 소금길’로 대표되는 국내 성공 사례의 단순 반복 및 적용, 물

리적 환경 개선에의 치중,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계획 수립, 유지관리 미흡으로 인한 지속성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이 과제는 범죄예방환경연구를 바탕으로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행정안전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관련 사업 실시 지역에 대해 범죄예방 계획 수립 및 운영을 지원한다. 지역 현황 분석, 범죄영향평가, 중·장기 범죄예방 계획 수립, 기초설계안 제공, 사업결과 및 성과 분석을 통해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국내 환경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 추진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지원기반 구축 및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지속적·거시적 관점에서의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손동필

③ 경상북도(상주, 군위, 청도) 한옥 전수조사 및 DB구축 연구용역

2015년 6월 국가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등 한옥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한옥의 수량, 보전 상태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부족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상북도 내 분포하고 있는 한옥에 대한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관련 정책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한옥 DB의 구축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4년도 한옥 전수조사 지역 선정을 위한 지자체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상북도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23개 시·군에 대한 ‘경상북도 한옥 전수조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2014년 경상북도 고령군, 영주시를 대상으로 한옥 전수조사를 시작하여 2018년 상주시, 군위군, 청도군을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전역에 대한 한옥 전수조사와 DB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한옥 전수조사는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사전조사로 건축물대장 정보를 활용하여 목조건축물을 추출하고 항공사진 및 로드뷰 판독을 통해 한옥 일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잠정한옥)을 추출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현장기본조사로서 잠정한옥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한옥 여부를 최종 판단하고 구조, 외관, 재료 등의 정보를 기록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건축 시기별 대표 한옥을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현장심층조사를 통해 지역의 한옥건축 특성을 파악하는 단계이다. 2018년도에는 상주시, 군위군, 청도군에 분포하고 있는 목조건축물 약 2만 6,666채를 대상으로 조사가 추진되고 있다.

2018년도는 경상북도 한옥 전수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조사 대상지에 대한 한옥자산 DB 구축·분석과 함께 경상북도 전역에 대한 한옥현황 및 한옥통계를 생산하고, 지속적인 한옥자산 DB 유지관리를 위한 한옥자산 운영관리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가 완료된 후 경상북도는 8개 도(道) 지역에서 한옥자산 DB가 구축되는 최초의 지역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또한 이 연구의 성과물인 한옥자산 DB를 토대로 경상북도 한옥 국가승인 통계 등록을 추진하는 등 공신력 있는 한옥 정보를 구축·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며, 한옥자산의 분포 특성 및 관리 상태 등을 고려한 정책 수립 등 근거 기반의 한옥 진흥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경

4 걷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지침 마련 연구

보행은 가장 기본적인 이동수단으로서 신체와 지각을 통해 장소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고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다층적, 복합적인 행위이다. 그러나 자동차 중심 도시에서 보행은 비효율적이고 부차적인 수단으로 간주되고 이러한 경향이 누적되면서 도시 전체적으로 보행보다 차량 이용이 편해지게 된다. 보행자의 입지가 좁아질수록 차량 교통 수요가 늘어나고 교통 혼잡과 비효율이 가중되는 역설은 자동차 중심 도시가 도시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근본적 한계를 노출하며 보행중심 도시로의 전환이 절실한 과제를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후반 이후 삶의 질에 대한 의식과 함께 걷고 싶은 도시의 가치와 필요가 대두되고, 보행자 중심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도시계획에 관련된 지침들은 여전히 차량 이동의 효율성을 전제로, 보행친화요소를 파편적으로 다루는 데 그쳐 걷고 싶은 도시를 위한 총체적 접근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자동차 중심의 기존 계획지침을 보행중심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계획지침으로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보행친화도시의 이론적 배경과 계획요소 및 선진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적용가능한 보행친화 도시계획의 주요 요건을 제시하며,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걷고싶은도시 계획수립지침(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도시환경요소 간의 정합성과 공간 유형별 계획 프로세스를 고려한 지침 개선을 통해 다양한 위계·방법의 도시계획 및 설계에 보행친화도시의 계획 원칙이 신속히 적용될 것을 기대한다.

오성훈

5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모델 개발 연구

역사문화자원은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며 공생하고 있으나, 산업화 및 자본주의 체계에서 역사문화자원이 갖는 의미와 가치가 인정되지 못한 채 소멸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2001년부터 지정문화재 제도뿐만 아니라 근현대 시기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보호체계로서 ‘등록문화재 제도’가 시행 중이나, ‘2017년 등록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결과 등록문화재의 절반 정도가 주의 관찰 대상, 모니터링, 보수정비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어 관리체계의 취약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과 더불어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역사문화자원의 개별적 가치에 중점을 두는 것과 함께, 역사문화자원이 집적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 가치의 증진과 더불어 집합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대한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역사문화자원의 개별적 가치와 함께 집합적 가치를 고려하여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계속 변화 발전하고 있으며 향후 미래세대에 계 유산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정의하고, 역사문화자원의 입체적 보존·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실행체계 구축,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우선 역사문화자원과 관련한 이론적 고찰과 국내외 역사문화자원 보존·활용사례 분석을 통해 근대역사문화공간의 개념을 정립하고 시대적 맥락에서의 가치를 발굴하고자 한다. 그리고 시범사업 추진 지원 및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 쟁점과 현안을 도출하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지속적인 조성 확산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진 체계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의 기본 방향 및 원칙, 사업 유형 도출, 세부 사업별 추진지침 등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정책화 과정을 거쳐, 근대역사문화공간이 실질적으로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유광흠

6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연구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정부는 건물 분야 핵심 정책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을 제정해 정책적으로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2014년에는 「녹색건축법」 제6조에 의거해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5년마다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18년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기간이 종료해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 인식 수준 향상과 녹색건축물 조성 기반 구축에 기여했다는 의의가 있는 반면, 신축 건축물에 온실가스 감축량이 편향되어 있다는 점과 녹색건축 관련 산업의 육성 전략 마련에 미흡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국가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과 함께 녹색건축의 효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개방형 계획 수립 방식을 채택하여, 학계·협회·산업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했다. 워킹그룹은 신축, 기축, 설계·시공, 자재·설비, 기술개발, 금융지원 등의 분과로 구분되며, 분과별 실효성 있는 전략과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또한 국민 대국민 정책제안 공모전을 추진하여 기존 정책 개선과 신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우수 제안 내용을 계획에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녹색건축 정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등의 글로벌 트렌드와 연계한 녹색건축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여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상규

7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건축은 광고, 미술, 음악, 영화, 출판, 소프트웨어 등과 함께 창조적인 인력을 바탕으로 신성장동력을 견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창조산업이다. 기획, 설계, 시공, CM, 유지관리 등 건축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건축물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건축사업의 기획 및 설계 단계의 기술과 전문가이며, 이는 곧 건축서비스산업의 영역이다. 또한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축 관련 전문 지식과 기술 제공 서비스를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 집약적이고 인적 자원이 중요한 지식기반산업이다. 이처럼 건축서비스산업은 대표적인 창조산업이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타 산업이나 해외 선진국에 비해 산업경쟁력은 취약한 상황이다. 아울러 인구·사회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공간 수요의 변화와 저성장 경제 상황의 지속,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으로 건축서비스산업 구조 또한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2013년 건축서비스산업을 고부가가치의 지식기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었다. 법 시행 이후 대표적인 건축사업인 공공건축에 대한 절차 및 관리 등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이 이루어졌으나,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대한 종합적이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5조에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기반 구축, 연구·조사·기술개발, 전문 인력 양성, 정보체계 구축, 홍보 및 국제교류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국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최상위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정책 여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분석을 통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추진 전략과 실천 과제를 도출하여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향후 5년간의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를 통해 건설이 성장을 주도하는 시대에서 건축이 성장을 지원하는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건축서비스산업이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도출하고, 나아가 건축서비스산업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창조산업이자 고부가가치의 지식기반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열철호

2018

해외전문가

초청강연회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7월 11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대회의실에서 '2018 해외전문가 초청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강연은 텍사스A&M대학교 Health Systems & Design Center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차남 교수가 맡아주었으며, 'Healthy and Walkable Cities: Current Research and Policy Efforts from the US'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먼저 'Healthy Community', 'Active Living Community'의 개념과 함께, 심각한 비만 문제와 대중교통·보행·자전거 이용이 감소하는 문제 등으로 'Walkable Community' 조성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건강한 커뮤니티 증진을 위해 미국건축가협회(AIA)와 미국 심리학회(APA), 미국공중보건학회(APHA) 등 기관이 상호 협력하고 있으며, 건강과 환경의 상관관계와 설계 방안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연구의 범위에 따른 조사 방법을 설명하고, 실제 진행된 프로젝트 사례로 걷기 좋은 커뮤니티를 설계하고 이주 주민을 대상으로 신체활동이 증가했는지 여부를 15년간 측정한 'Active Living Austin', 고령친화적인 커뮤니티 설계를 시도한 'AFC 8 Domains'를 소개하였다.

이후 강연 참여자들이 프로젝트 규모와 실제 수행 방법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건강하고 걷기 좋은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과제와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고영호

2018
제3회 AURI
마을재생
세미나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7월 16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대회의실에서 '2018 제3회 AURI 마을재생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도시데이터와 더 좋은 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강준범 교수(뉴욕주립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의 발제로 진행되었다.

먼저 도시계획에 있어 세밀한 수준의 도시 데이터가 보다 안전하고 걷고 싶은 도시를 설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도시설계와 정책 시행을 검증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공간데이터의 부족, 행태데이터의 부족, 방법론의 부재 등이 도시 계획 시 도시데이터의 활용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어 시애틀·버팔로·뉴욕과 같은 미국 도시에서 도시데이터를 활용하여 진행한 연구 사례, 행태데이터 등 도시데이터를 축척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소개되었다.

마지막으로 객관적인 도시데이터 수집의 어려움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용데이터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참석자들은 현대 도시문제 해결에 있어 도시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해볼 수 있었다.

윤주선



2018 찾아가는 공공건축 교육 실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9월 3일부터 18일까지 5회에 걸쳐 '2018 찾아가는 공공건축 교육'을 실시하였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 2항 6호에 의거하여 공공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 관계자의 공공건축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와 기획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공공건축 관계자 교육은 2014년부터 시행하여 주로 집체교육으로 연 1~2회 이루어져 왔는데, 시기와 장소 여건상 많은 참가 희망자에 비해 수용 인원이 한정되어 있었다. 올해는 이러한 교육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건축도시 분야 전문가 10인을 섭외하여 건축문화·도시재생·공공디자인 등 다양한 주제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신청 공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에 7월 말부터 공공기관의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9월부터 20개 기관, 총 1,7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9월 말까지 총 5개 기관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12월까지 공공건축과 주민 참여, 커뮤니티 디자인 등을 주제로 대전광역시청 등 15개 신청 기관에 대한 찾아가는 교육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염철호

2018 찾아가는 공공건축 교육 주제 및 발제자

주제	발제자	
사회가 만드는 건축 우리의 공공건축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김광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
도시와 지역의 풍경과 역사를 가꾸는 총체적 사고와 전략	김영섭	김영섭 건축문화건축사사무소 대표,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이야기로 집을 짓다 공주시 루치아의 들과 옛 골목 되살리기	노은주	가온건축 대표
건축의 시대 도시, 건축 현황과 정책과제	박인석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건축사연 마을과 사람들	윤승현	인터커드 건축사사무소 대표
일상이 만드는 작은 디자인 동네를 살리는 커뮤니티 디자인	이영범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일상의 공공성 참여 프로젝트 중심으로	정이삭	동양대학교 공간디자인학과 조교수, 에이코랩 대표
사회적 관계를 확산시키는 마을공동체의 설계 단독주택(단지), 공동주택의 설계에 관하여	조남호	솔토지빈 건축사사무소 대표
주민이 함께 만드는 공공건축 구산동도서관마을을 중심으로	최재원	플로건축사사무소 대표
무지개떡 건축 도시 건축의 보편적 유형	황두진	황두진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정책협의회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9월 5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중회의실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향후 국가건축정책의 발전 방향과 정책과제를 공유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양 기관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진행되었다.

정책협의회에는 박소현 소장(건축도시공간연구소)과 승효상 위원장(국가건축정책위원회)을 비롯하여 각 기관의 주요 인원이 참석하여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양 기관은 공공건축 혁신, 건축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 건축자산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과 연구·사업 수행 등 국가건축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10년간 협력해 이뤄온 성과를 공유하였다.

무엇보다 인구 구조 등 급격한 사회 변화의 양상을 반영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국가건축정책 어젠다를 공동으로 제시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앞으로도 양 기관은 사회 현안에 대응하는 정책연구와 대국민 행사 개최 등에 상호 적극 협조하며, 기관 간 인적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해나갈 것에 합의하였다.

고영호



건축도시 공간연구소, 2018 TWN 콘퍼런스 참석 및 차년도 개최기관으로 확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박소현 소장과 서수정 선임연구위원, 염철호 연구위원, 고영호 부연구위원은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된 '2018 TWN 콘퍼런스'에 참석하였다.

TWN(The Workplace Network)은 전 세계 20여 개 국가의 공공건축 관련 기관이 소속된 정책 네트워크로 소속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소속 기관이 공공자산과 공공건축물 관리를 위해 펼치고 있는 정책적 노력과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TWN의 정식 멤버로서(2016~) 이번 콘퍼런스에 참석하였으며, '한국의 국가청사 건립체계(The Status & Issues of Government Building Development System in Korea)'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다.

발제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공건축지원센터장인 염철호 연구위원과 고영호 부연구위원이 맡았으며, 우리나라의 국가청사 조성 프로세스와 관련 주제, 미국·일본 등 다른 국가의 건립체계와의 비교를 통한 한국의 특징을 소개하였다. 또한 한국 국가청사 건립과 관련된 현안과 함께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폐회식에서는 2019년 TWN 콘퍼런스 개최지로 한국이, 개최기관으로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선정되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앞으로도 공공건축을 비롯한 건축·도시 분야 관련 국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국내외 기관 간 성과와 지식 교류의 중심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다.

고영호



news